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의 주요내용¹⁾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1 들어가며

아동정책기본계획은 국가의 아동정책을 어떤 원칙과 방향 아래 추진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대표적인 중장기 계획이며, 아동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범정부적 기본계획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2015년 이후 이어져 온 기본계획의 연속선상에서 제2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최근의 사회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새롭게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아동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인식 위에서 출발한다. 물질적 생활 여건은 일정 부분 개선되었으나, 디지털 과의존, 온라인 유해정보, 정신건강 악화, 여가 결핍, 돌봄 사각지대, 재학대 증가, 특수육구아동 확대 등 새로운 위험과 복합적 취약성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아동 정책은 더 이상 빈곤이나 보호 중심의 사후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보편적 성장·발달 지원과 취약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아동 참여와 권리 보장을 통합적으로 설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제3차 기본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한다. 이는 아동을 보호의 객체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보고, 아동의 발달단계별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사각지대 없는 보호체계, 아동이 정책 형성에 참여하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전 계획보다 한층 확장된 관점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추진배경을 살펴보고, 이번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 및 전략과 이에 따라 도출된 분야별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의 의의와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추진배경

가. 포괄적·보완적 기본계획의 추진 필요성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법정 기본계획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정부는 5년 주기로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해 왔으며, 아동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범정부적 조정을 위해 중장기 계획 체계를 유지해 왔다.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은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을 비전으로 교육·역량 강화, 건강, 안전, 보호 아동 지원, 아동정책 인프라 및 환경조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아동권

1) 본고는 「관계부처 합동(2025. 12).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5~’29)」과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4).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음.

리 실현, 균형 있는 건강·발달, 취약아동 국가책임 강화, 코로나19 대응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삼았다. 이번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러한 기존 계획의 연속선 위에서 마련된 것이다.

특히 제3차 기본계획은 개별 부처의 사업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아동정책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3차 기본계획은 「빈곤아동 지원 기본계획」의 내용까지 포함하도록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성장·발달, 보호, 권리, 빈곤 대응을 분절적으로 다루지 않고 하나의 국가 아동정책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다루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기본계획은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그 한계를 보완하려고 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에는 아동정책영향평가 확대, 보호자 징계권 폐지,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도입 등 아동 권리와 보호의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었다. 이는 국가가 아동 보호와 권리 보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화해 왔음을 보여주는 성과이다. 건강·발달 영역에서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확대, 전문상담교사 증원,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기준 강화 등이 성과로 제시되었다. 아동학대 대응 분야에서도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배치 등을 통해 사후 대응 중심에서 조기 발견 및 개입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기존 대책과 기본계획은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분석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범부처 아동정책 추진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 지표 목표 달성률은 15개 지표 중 9개 지표 달성으로 60%에 그쳤고, 이에 따라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에 대한 체감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기존의 정책 성과를 단순히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과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체감 제고와 통합적 실행으로 연결

하는 방향에서 수립될 필요가 있었다.

나. 정책 환경 변화와 새로운 정책 수요 확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또 다른 추진배경은 아동을 둘러싼 정책 여건의 변화이다.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 물질적 환경 등 아동의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아동 결핍지수는 2018년 31.5%에서 2023년 17.6%로, 아동가구 빈곤율은 2015년 16%에서 2020년 9.8%로 낮아졌다. 그러나 일반가구 대비 수급가구가 느끼는 상대적 격차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평균적 생활수준 개선과 별개로 취약한 아동 집단의 상대적 어려움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 과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건강과 발달 환경의 변화도 중요한 정책 여건으로 제시되었다. 디지털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성인(22.4%)에 비해 유아동(25.9%)과 청소년(42.6%)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9~17세 아동 자가응답 비만율은 2018년 3.4%에서 2023년 14.3%로 상승하였다. 아동이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은 2019년 70%에서 2024년 66.1%로 감소하였다. 또한 학업성취도는 소폭 상승했으나 사교육비는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은 하교 후에 친구들과 놀기, 운동 등 여가 활동을 희망하나 충분한 여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 환경 여건은 아동정책이 생존과 보호의 문제를 넘어, 일상적 건강, 정신건강, 여가와 발달 환경까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보호와 안전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정책 수요가 제기되고 있다. 나홀로아동 등 돌봄 사각지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건이 발생했으며, 아동학대 의심사례와 재학대 비율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 한편, 보호조치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보호대상아동 가운데 ADHD 및 경계선 지능 등 특수육구아동 비중의 증가세가 보고되었다. 이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양상이 단순히 보호대상 여부로만 설명되지 않고,

보다 복합적이고 세분화된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에서도 제3차 기본계획 수립 시 최근의 정치·경제·사회·기술 환경 변화와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 및 한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기존 계획의 연속선 위에서 수립되었지만, 그 필요성은 변화한 정책 여건과 확대된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아동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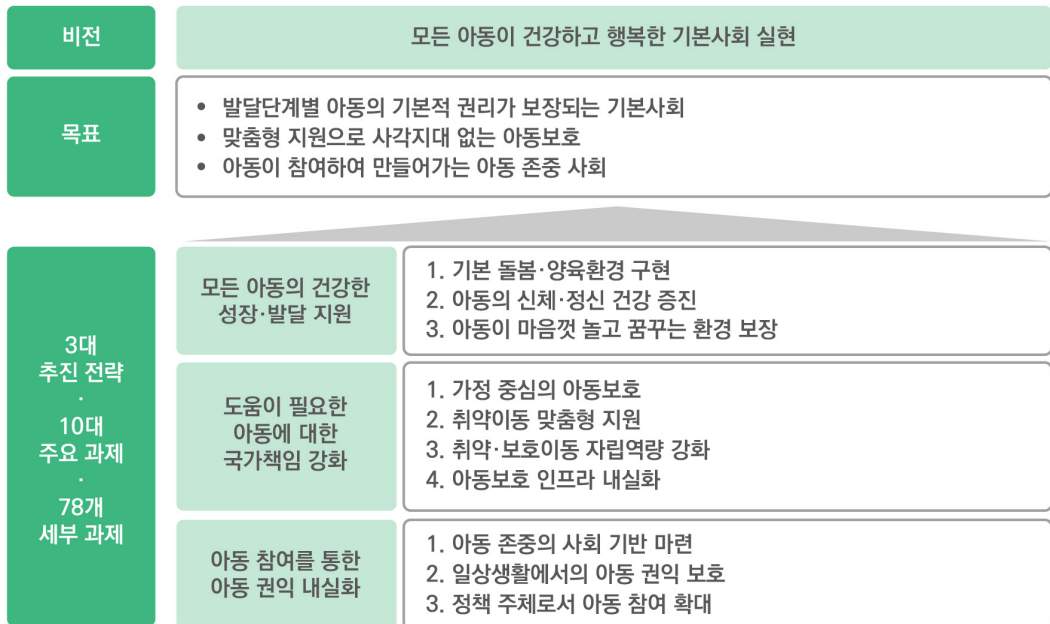
3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 및 전략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비전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이다. 여기서 아동

기본사회는 모든 아동이 최소한의 보호를 받는 수준을 넘어, 발달단계별로 필요한 돌봄, 의료, 교육, 여가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의미한다. 제3차 기본계획은 비전 실현을 위한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한다. 첫째, 발달단계별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기본사회, 둘째, 맞춤형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아동보호, 셋째, 아동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아동 존중 사회이다.

이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계획은 3대 추진 전략, 10대 주요 과제, 78개 세부과제를 구성하였다. 각 추진전략별로 다시 세부적인 주요과제를 배치하여, 보편적 발달 지원과 취약아동 보호, 아동권리 증진을 하나의 기본계획 안에서 연결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첫 번째 전략은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이며, 여기에는 기본 돌봄·양육환경 구현,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 증진, 아동이 마음껏 놀고 꿈꾸는 환경 보장이 포함된다. 두 번째 전략은

[그림 1]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비전과 추진전략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5. 12.).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5~'29), p.16.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가정 중심의 아동보호, 취약아동 맞춤형 지원, 취약·보호 아동 자립역량 강화, 아동보호 인프라 내실화가 포함된다. 세 번째 전략은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로, 아동 존중의 사회 기반 마련, 일상생활에서의 아동 권익 보호, 정책 주체로서의 아동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한다.

제3차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은 크게 둘로 구분하면, 하나는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보편적 기반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와 국가책임 강화이다. 여기에 더해 아동의 의견 존중과 참여 확대를 별도의 전략축으로 설정하였다.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정책을 보호의 문제뿐 아니라 권리와 참여의 문제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정책체계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이번 기본계획의 또 다른 특징은 범부처 협업과 제도 개선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주요 과제 중 상당수가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아이돌봄지원법, (가칭) 아동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제3차 기본계획이 선언적 수준이 아닌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4 분야별 핵심과제

가.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첫 번째 추진전략 영역은 모든 아동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장·발달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는 아동정책을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보호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아동의 일상적 삶의 조건과 발달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해당 추진전략의 첫 번째 중점과제는 기본 돌봄·양육환경 구현이다. 이 과제에서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년씩 점진적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가산급여를 추진한다는 점은 아동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결합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일하는 부모의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자녀의 입원, 휴교, 방학 등 일시적 돌봄 공백 상황에 대응하는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과 사업주 부담 완화, 유연근무 활성화를 함께 추진한다. 부모교육 역시 부처별로 분산된 콘텐츠를 연계하고 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부모의 실질적 양육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돌봄체계의 측면에서는 나홀로아동 보호가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마을돌봄시설의 연장 돌봄 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하고 참여기관을 늘리며, 아동 방임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동시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아이돌보미의 돌봄수당 인상과 일자리 환경 개선, 민간서비스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접근성과 이용자의 양육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아침·저녁·휴일 등 긴급돌봄 및 틈새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틈새돌봄 운영기관과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3차 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초등 돌봄·교육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하고, (가칭)온동네 돌봄·교육센터를 2025년 58개에서 2030년 300개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한다. 이는 학교 안팎의 교육과 돌봄, 학교와 지자체 간 역할을 분담·연계하는 지역 기반 돌봄체계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두 번째 중점과제는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 증진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 과의존을 단순한 개인의 습관 문제가 아니라 예방교육, 상담, 가이드라인, 기업의 자율조치,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연구가 함께 필요한 구조적 문제로 다룬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에서는 조기 발견, 연계·치료, 기반 강화를 포함하는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행동특성검

사, 마음EASY검사, 마음바우처, 전문상담인력 확대를 제시하였다. 자살 예방 강화 과제는 자살예방센터와 유관기관의 협업체계 구축을 토대로 조기발굴과 서비스 연계지원, 교육·상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학생 대상 심리부검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신체 건강 측면에서는 학교 체육수업 내실화와 학교 스포츠클럽 확대, 틈새시간을 활용한 규칙적인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확대, 학생 건강검사의 국가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으로 통합, 학생검진 결과를 활용한 소아비만 예방과 관리서비스 연계가 포함된다. 이는 건강정책과 교육정책을 분리하지 않고, 학교를 아동 건강검진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향성으로 해석된다.

소아의료와 예방접종 강화도 중요한 과제이다.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와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중증·응급·지역 소아의료 인프라 확충, 중증소아 수가 지원 및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등을 포함한다. 특히 소아 진료 인프라 확충과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본사업 추진 검토는 소아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진료 인프라 강화로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중점과제는 아동이 마음껏 놀고 꿈꾸는 환경 조성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공교육 내실화,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 이음교육 확대, 누리과정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 문화취약계층 지원 확대, 아동친화적 문화시설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한 체험활동 제공 등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히 학업성취가 아니라 놀이, 문화, 체험, 여가를 아동 발달의 핵심요소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마약·도박 등 불법·유해정보의 신속한 차단과 상시 모니터링,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아동의 온라인 생활공간을 안전하게 만드는 과제도 병행한다.

나.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두 번째 추진전략은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이며, 이 전략의 중점과제는 가정 중심의 아동보호, 취약아동 맞춤형 지원, 취약·보호아동 자립역량 강화, 아동보호 인프라 내실화이다. 이는 취약아동 보호를 단순한 응급개입이나 시설수용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발견, 보호, 회복, 자립에 이르는 연속적 지원체계로 전환하려는 방향을 보여준다. 또한 제2차 기본계획에서 형성된 공적 보호체계를 보다 정교화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수유아 아동과 취약가구 아동 증가에 따른 수요의 다변화에 대응하려는 성격도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권리주체'로 보면서, 보호를 국가의 지속적 책임구조 속에 배치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1) 가정 중심의 아동보호

가정 중심의 아동보호에서는 입양, 가정위탁, 후견, 원가정 복귀, 시설보호 등에서 아동보호 내실화하고 가정형 보호를 확대하려는 방향성이 드러난다. 우선 기존 민간기관 중심의 입양체계에서 국가와 지자체 관리 하의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하고, 해외입양의 단계적 중단을 추진한다. 입양정책위원회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입양을 심의·결정하도록 한 점은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장치이다. 가정위탁 분야에서는 지역주도 사업을 국가 차원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위탁가정 지원과 전문위탁을 확대하며, 위탁부모에게 입·전학, 진료, 휴대전화 개통, 계좌 개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후견제도 개선과 공공후견제 도입, 초기 보호단계부터의 가정형 보호 강화와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지원 역시 보호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시설보호 영역에서도 아동의 권익과 전문서비스 중심의 재편이 강조된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고, 시설의 투명성 제고와 아동권리 강화를 위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아동양육

시설의 기능 고도화와 특수육구아동 서비스 연계와 진료 지원, 시설안전 강화도 포함한다. 특히 정책 여건에서 보호대상아동 중 ADHD와 경계선 지능 등 특수육구아동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시설보호정책은 규모보다 전문성, 표준화된 서비스보다 맞춤형 지원 역량이 더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 지점에서 보호정책의 질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는 국가책임 강화 전략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AI 예측모형을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발견, 학대 판단 이전 단계에서의 예방적 지원, 재학대 방지와 회복 지원, 아동사망 검토 제도 도입과 아동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한 환류체계 구축 등을 제시한다. 이는 학대 발생 후의 사후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위험징후 포착, 가족기능 회복, 의료지원, 환류체계를 포함하는 보다 입체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2) 취약아동 맞춤형 지원가점

취약아동 맞춤형 지원에서는 위기와 취약의 유형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번 기본계획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아동의 발달과 환경을 고려해 고도화하고,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장애아동의 경우 제도 접근성을 개선하고,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치료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해서는 교실-학교-학교 밖의 3단계 안전망을 마련하여 학습속도와 수준에 맞는 지원을 하도록 설계하였다.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과 저소득 한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학습·정서·역량강화를 포함하였으며,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실태조사,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검토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취약아동을 하나의 동질적 범주

로 다루지 않고, 각 집단의 제도 접근성과 지원 필요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3) 취약·보호아동 자립역량 강화

취약·보호아동 자립역량 강화는 보호 종료 이후의 삶까지 국가책임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3차 기본계획은 아동발달지원계좌 활성화를 위해 기업 사회공헌과의 연계, 후원모집 협력체계 강화, 가입률 제고와 취약가구 납입률 저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계 단절, 자살 고위험군 등 고위험 사례 맞춤형 지원을 도입하고, 경제적 자립 지원,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 취업 가점 도입까지 검토한다. 이는 보호의 종료가 곧 국가책임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인식 위에서, 성인 초기의 이행기까지 정책적 지원을 연장하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4) 아동보호 인프라 내실화

아동보호 인프라 내실화는 개별 사업의 확대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다루는 과제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무분석, 체계 개편,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고, 종사자 처우개선과 인력 확충, 분산된 아동 관련 시스템의 통합·연계, 공통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한 일원화된 아동 정보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맞춤형 서비스와 중복·누락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아동 관련 지원이 지자체, 학교, 복지기관 등 여러 경로로 흩어져 있고, 시스템이 다부처에 분포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달체계와 정보체계의 통합을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다.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

세 번째 추진전략은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이다. 제3차 기본계획은 이를 아동 존중의 사

회 기반 마련, 일상생활에서의 아동 권익 보호, 정책 주체로서 아동 참여 확대의 세 과제로 구성하고 있다. 이는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관점을 넘어, 스스로 권리를 가진 존재이자 정책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을 보여준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도 아동 권리 실현이 중요한 전략이었으나,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그 범위가 법·제도, 절차적 권리, 정책 참여, 정보 접근과 역량 강화까지 한층 넓어졌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1) 아동 존중의 사회 기반 마련

우선 아동 존중의 사회 기반 마련에서는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제시를 위해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주요 내용으로 아동의 기본권, 국가와 사회의 역할 명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현재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아동 관련 법령을 상위의 기본법적 틀 속에서 포괄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아동정책실무위원회 운영 확대와 아동정책영향평가 확대 시행을 통해 아동정책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아동친화도시의 인증·관리기준과 운영체계를 제도화하며, 아동친화업소 인증을 도입하는 등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도 병행하고자 한다.

2) 일상생활에서의 아동 권익 보호

일상생활에서의 아동 권익 보호는 국제적 권리 보장과 국내 절차적 권리 확대를 포괄한다. ‘통보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검토하고, 사법절차상 아동의 의견표명권의 도입 및 확대와 아동보호 등 행정절차에서의 의견표명권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아동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의 통로를 넓히고, 아동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결국 제3차 기본계획은 아동을 보호적 대상과 배려의 조치 정도에 머물

게 하지 않고, 아동에 대한 법적·절차적 권리를 구체화하려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3) 정책 주체로서 아동 참여 확대

정책 주체로서 아동 참여 확대는 이번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평가 결과의 환류체계를 개선하여 정책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ی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아동총회와 아동권리포럼 등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하고, 아동 관련 회의체에 아동 참여를 넓혀 아동 당사자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더불어 아동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 디지털 역량 및 기후위기 대응 교육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아동 참여를 단순히 소수의 아동 대표를 포함시키는 절차적 장치로 보지 않고, 정보 접근, 의견 형성, 정책 반영의 전 과정을 구성하는 실질적 참여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 전략은 아동정책을 복지와 보호 중심 체계에서 권리와 민주적 참여를 포함하는 체계로 확장하는 의미를 갖는다. 아동기본법, 선택의정서 비준 검토, 의견표명권 확대, 정책영향평가 내실화, 아동 당사자 참여 확대는 서로 분리된 과제가 아니라, 아동을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관점의 전환을 여러 층위로 구성한 것이다.

5 맺음말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정책의 지평을 세 가지 방향에서 확장하고 있다. 첫째, 보호 중심의 정책에서 성장·발달과 삶의 질을 포괄하는 보편적 아동정책으로 확장하고 있다. 둘째, 취약아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사후 대응이 아니라 조기발견, 예방, 맞춤형 지원, 자립지원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책임체계로 재구성하고 있다. 셋째, 아동 당사자 참여

확대를 통해 아동을 권리와 참여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제시한 기대효과도 이러한 방향을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29년까지 아동 삶의 만족도와 여가활용 만족도를 높이고, 가정보호율을 제고하며 재학대율을 낮추고,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와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자체 개선이행률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는 아동정책의 성과를 단순한 예산 집행이나 서비스 공급량이 아니라, 아동의 삶과 권리, 보호체계의 실효성, 정책 환류의 질로 측정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번 기본계획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병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 첫째, 법령제·개정과 예산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장기적으로 GDP 대비 아동(가족) 대상 공공사회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2025~2029년 78개 과제에 대해 약 35.7조 원 규모의 재정투입을 잠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범부처 협업과 지방정부의 실행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셋째, 아동 당사자의 참여가 선언적 문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형성과 평가 과정에 제도적으로 내재화되어야 한다.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핵심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 구조를 재정비하고, 아동의 일상과 권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는 데 있다.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수립한 비전과 목표를 충분히 달성한다면, 아동정책의 양적 확대를 넘어 아동정책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과제는 이러한 기본계획의 방향과 내용이 실질적으로 정책집행과정과 사회에서 구현되어 아동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